

Vol. 01

2024.01.12.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3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박현민전임 hmpark@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품목분류 변경고시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와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프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프방기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 회피 방지 등 (제21조3항 신설)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우회덤핑을 통한 덤프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 (제56조의 2 신설)	덤핑방기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프방기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프방기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 (제246조의 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246조의 2 제1항 중 "물품에"를 "물품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액"을 "대상 및 보상금액"으로 수정하여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함.

(3) 시행일

`24.01.01

I. 법령 개정사항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하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장 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 물품 추가 (별표 2의4)	(1) 8460.40;8460.90 : 호닝머신이나 래핑머신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베어링(Bearing) 제조용 슈퍼피니싱기(Superfinishing)로서 외경이 130밀리미터(mm) 이하이고, 폭이 50밀리미터(mm) 이하인 가공물을 연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축의 분당 최대 회전수가 4,000회 이하이며, 지석 진동수가 분당 최대 1,25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8463.90;8479.89 : 기타 에어로졸 캔(Aerosol Can) 제조에 필요한 직경축소(Necking)·굽힘(Flanging) 및 이중 권체(Seaming)가 가능한 자동 캔 제조기로서 각 공정별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고, 분당 270개 이상의 캔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향수 면세한도 상향 (제48조제3항의 표)	향수 면세한도를 60mm에서 100mm로 상향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제50조1항)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3) 시행일

’24.01.01

I. 법령 개정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 마련 (제12조제3항)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함.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 농어업인 확대 (제13조제2항 신설)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까지로 확대함.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 마련 (제35조의 2 신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함.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행일

’24.01.01

I. 법령 개정사항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으로 정함.
소비자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3) 시행일

’23.12.14

I. 법령 개정사항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법률 제1962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	종전의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함.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으로 정함.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함.

(3) 시행일

23.12.14.

I. 법령 개정사항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역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역금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와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시행일

’23.12.12

I. 법령 개정사항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 (제19조제4항제5호 신설)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체계 명확화 개선 (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3) 시행일

’23.12.29

II. 입안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서류·현장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대상을 외화획득용 원료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축산물의 정밀·무작위 표본검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서류·현장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대상을 외화획득용 원료도 가능하도록 개선
축산물의 정밀·무작위 표본검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의견수렴기간

2024.01.31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마미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마미콜
물품 설명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등록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폰에 주파신호를 보내주거나 위급시 알람음을 울려 위치를 알려 주는 소형 전자기기
HS CODE	- 변경 전 : 제8517.62-9000호 (C/0%) - 변경 후 : 제8531.80-9000호 (C/0%)
변경 사유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이고, 주기능은 알람음을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31.80-9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로 분류(제 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12.05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2. Backing Plate(with ITO Target)등 4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Backing Plate(with ITO Target) 2. Other articles of cobalt ; Cobalt Target ; Japan 3. Other articles of nickel ; Nickel Target ; Japan 4. ITO Target(Backing Plate)
물품 설명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서, 전도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퍼터링 타겟과 타겟을 챔버내에 고정시키고 스퍼터링 작업시 도체 역할을 하는 특정 형상의 백킹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
HS CODE	-변경 전 : ① 6909.19-0000 (A/8%), 7419.99-9000 (A/8%) ② 8105.90-0000 (A/3%), 7419.99-9000 (A/8%) ③ 7506.10-1000 (A/3%), 7616.99-9090 (A/8%) ④ 6909.19-0000 (A/8%), 7419.99-9000 (A/8%) (재질별로 '타겟'과 '백킹플레이트'를 각각 분류) -변경 후 : ① 제8486.90-3050호 (A/0%), ② 제8486.90-2040호 (A/0%) ③ 제8486.90-2040호 (A/0%), ④ 제8486.90-3060호 (A/0%)
변경 사유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소재인 타겟보다는 진공 챔버 내에서 스퍼터링 기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백킹 플레이트'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86.90-3050호 또는 제8486.90-3050호 등, 해당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12.05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3.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Hand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W'S ROUND MINI SHOULDER BAG; 05261H033A 2.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 WSA101
물품 설명	방직용 섬유제(직물)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손가방으로 휴대폰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HS CODE	-변경 전 : ①제4202.22-2000호 (A/8%), ②제4202.22-1090호 (A/8%) -변경 후 : ①제4202.92-2000호 (A/8%) ②제4202.92-1090호 (A/8%)
변경 사유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4202.92-2000호 또는 제4202.92-1090호의 기타 가방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12.05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4. TOTE BAG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TOTE BAG; R.KOREA
물품 설명	방직용 섬유제(직물)로 만든 어깨에 메는 형태의 손가방으로 휴대폰이나 화장품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HS CODE	-변경 전 : 제4202.92-2000호 (A/8%) -변경 후 : 제4202.22-2000호 (A/8%)
변경 사유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수납공간,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4202.22-2000호의 핸드백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12.05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5. SLT Baske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kitchen articles Of steel ; SLT Basket(D1-YSL-150DM) ; PR.CHNA
물품 설명	양념통이나 조리도구 등을 수납하기 위해 주방 하부장 내부에 설치하는 철강제 선반으로 하부장 도어를 열면 안쪽의 수납공간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음
HS CODE	-변경 전 : 제7323.99-0000호 (A/8%) -변경 후 : 제9403.99-0000호 (A/8%)
변경 사유	제9403호에 분류되는 주방용 가구의 하부장을 구성하는 유닛으로 벽 중간에 짜 맞춰 사용하는 식기용 선반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제9403.99-0000호의 기타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23.12.05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12 월 22 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관세청, 12 월 6 일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 무역하기 좋은 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고광호 관세청장은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 월 6 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 월 22 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 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 년 총 접수건의 42%, 63 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참고.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추진경과] 한국 관세청이 인도 관세당국에 EODES 도입 최초 제안('17.2) → 양국 정상회의시 EODES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19.2) → 양국 관세당국 간 EODES 구축 양해각서(MoU) 체결('19.5) → 시범운영('23.11)

[한국 관세청과 EODES 운영국가(개통시기)] 중국('16.7), 인도네시아('20.3), 베트남('23.7)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 만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 신고서 작성 시간 107 만 시간 단축 및 신고서 제작 예산 2 억 4 천 만원 절감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 월 1 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8 월 1 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5 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약 2200 만명, '23.12.20 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 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 억 4 천만 원**을 아꼈다.

* '23 년간 107 만시간 절감 = 2150 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 3 분(1 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 '23 년간 2 억 4 천만원 절감 = 2150 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 11 원(1 장당 인쇄단가)

엔데믹 선언('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 천만 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스마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3.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 영국 진출 우리기업 통관절차 간소화의 법적 기반 마련…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한-영국 정상회담(2023.11.22.)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3.12.22.(금)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한-유럽(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동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하여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영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총 26 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4. 제 33 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682 개 추가
- 전략물자 사후관리 강화 및 면제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 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통제대상 품목을 총 1,159 개로 확대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추후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향(向)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설명회('24.1.12.(금) 잠정)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對러/벨 수출통제 품목 확대

-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국제사회 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추가

개정 전 798 개	개정 후 1,159 개
(현재) 전자, 조선, 산업·건설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등	(신규)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 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 (통제기준 변경)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 기준에서 품명·기술 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 기준으로 변경

품목 구분	통제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 관련 품목	품명(기술사양)	품명(기술사양)
일반산업품목		HS 6단위 코드
승용차	미화 5만불 초과	배기량 2,000CC 초과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허가 지침 신설) 그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對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2. 제도 개선

-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 마련 (33 조 2 항 및 39 조 2 항)
* 다만, 방사청과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
- KOICA 의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를 신설,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 추진 (26 조 1 항 4 호)
- 원자력전용품목 박람회 등 출품시 허가 면제 적용 (26 조 1 항 8 호)
- 원자력전용기술 허가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20 개국)에서 협정 체결국(29 개국)으로 확대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5.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사우디 포함 GCC 6 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新) 중동북'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환경 조성
- GCC 에 대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확대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및 지재산 규범 합의로 우리 상품·기업의 안정적 진출 여건 마련
-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소, 바이오경제, 헬스케어 등 향후 GCC 와 협력 유망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강화 합의

*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 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 월 28 일(목)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Jassim Muhammad Al-Budaiwi) GCC 사무총장과 의 한-GCC 장관회담 계기에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GCC FTA 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 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 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 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 이다. GCC 는 싱가포르 및 EFTA 와는 FTA 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GCC 기체결 FTA) 싱가포르 '08년 체결 '13년 발효, EFTA '09년 체결 '14년 발효

** (영국) '22년~'23년 동안 5 회 협상 진행 (중국) '05년~'22년까지 10 회 협상 진행 (일본) '06년~'09년 동안 2 회 협상 진행 이후 중단, '23.7월 재개 선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 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 약 1,026 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 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하여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하여 GCC 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 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한-GCC FTA 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하여 12 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 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하여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시장개방		
상품 [품목수: 한-89.9%, GCC-76.4 (+4.1)%	(한→GCC)	주력 수출품 (자동차·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및 무기류 등) 상당수, 농·축·수산물 (쇠고기, 인삼류, 조제 식품, 조미김, 참치, 어묵, 굴) 등 관세 철폐
	(GCC→한)	천연가스·석유제품·알루미늄 등 주력 생산물 (원유 제외), 농축수산물(대추야자, 홍차, 빵, 식물성 기름, 어류 기름 등) 등에 대한 관세 철폐, 나프타 관세 50% 감면
서비스	○ 우리측 관심 분야인 영화 배급 및 의료 서비스(병원 현지 개원 및 중동 환자 유치 등) 등에서 WTO 서비스 협정 대비 개방 수준 제고 ○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 개선 등 통해 기업 애로 해소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가입국인 UAE, 바레인과 GPA 수준으로 비차별·투명성 원칙 합의 및 상호 시장 개방 ○ 양허 하한선을 낮춰 국내 기업의 GCC 측 조달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바레인)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상호 개방(중앙정부 기관 28 개, 공공기관 12 개) - (UAE) 중앙정부 상호 개방(국내법상 양허할 수 있는 모든 27 개 연방기관)	

협정문 : 총 18 개 장	
원산지	○ 공산품, 석유화학 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 마련 ○ 동물성 생산물 및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으로 합의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디지털	○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 등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AI, 중소기업 등 협력 요소를 규정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
지재권	○ 저작권·상표 등 실체적 보호규범 및 침해 관련 실효적 집행규범 합의 등 GCC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수준 규범 도입

경제협력 : 6 개 부속서	
에너지 · 자원	※ GCC 가 체결한 FTA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본문 및 부속서로 포함 ○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 에너지·자원 협력 체계 구축
바이오경제	※ GCC 가 체결한 FTA 최초로 바이오경제 협력 규정 포함 ○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바이오 분야 경제 협력 상세 규정 도입